

# 어민이용에 불편없는 항 관리를 전문행정기관이 맡아야

金永俊 <속초시수협 조합장>

**속** 초항은 해운항만청 지정 무역항이다. 속초항은 안벽 262m, 물양장 1,485m, 방파제 1,051m, 하역능력 67만 5,000톤, 접안능력 2척으로 무역항치고는 다소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런데 속초항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제도가 얼마나 어쭙잡게 국민들의 생활을 얽어놓으며 허점이 많은지 알 수 있다. 항만과 어항이라고 커다랗게 그어 놓은 선으로 인하여 어민들이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속초항은 화물부두이다. 한때, 이른바 북방외교라는 이름 아래 남북한간의 교류가 결실을 보일 듯 했을 때엔 매우 각광을 받기도 했으나 이후 그것이 시들해지면서 화물선의 양도 함께 줄어들었다. 오히려 속초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거의 대부분 어선이며, 양륙물량의 99%가 수산물로 채워지고 있어 어항의 성격이 가장 농후하게 드러나

는 편이다. 그럼에도 관리의 주체가 해운항만청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한 대로 속초항이 무역항인데다 화물부두라서 시설 자체가 어선이 이용하기에 적합치 않고, 또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수협의 위판장이나 양수시설, 혹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데도 일일이 해운항만청의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니 과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비록 속초항이 해운항만청이 운영하는 무역항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항의 이용자가 거의 대부분 어민이며, 어선이라면 당연히 행정체계도 그런 방향으로 잡혀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수산업 허가나 이용에 관한 것은 수산청에, 속초항 이용에 관한 것은 해운항만청에다 수속을 해야 되는 이원행정체계를 갖고 있으니 제도나 규칙이야 어찌됐든 현

지 실정에 맞게 시급히 정비,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물론 해운항만청도 나름대로 이를 주시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에 옮기고 있어 어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긴 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동해 복단에 위치한 속초항의 기존 북항은 화물선 및 여객선 등 상항 위주의 항만으로 전문화시키고, 청초호를 어항 및 관광위탁 기능항으로 개발해 항기능별로 특성을 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와함께 해운항만청은 실제로 청초호 개발을 시작했는데 '90년부터 '97년까지 총 164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330m, 물양장 861m, 호안 182m를 축조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속초항을 이용하는 어선 물양장 수요 800여척의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초 수협은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위판량이 많은 매우 큰 규모의 수협이다. 더욱이 속초지역이 어선어업이 매우 발달돼 있는 데다 대화퇴나 어로한계선 부근으로 출어하는 어선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한때 정부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전략적 차원의 무역항 개발 조짐도 없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초항 관리의 주체나 성격은 자명해진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잡혀야 할 것이란 뜻이다.

혹시 오해가 있을 듯 싶어 부연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어민들의 입장에선 속초항의 관리 주체가 해운항만청이 됐든, 아니면 수산청이 됐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르긴해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을 때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누구가 관리자가 됐든지간에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된 어항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그것도 가능하다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소박한 소망이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바다는 참으로 거칠고 무섭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조업에 임한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업에 나서 겨우 어획한 수산물을 육지에 싣고 와서 양륙의 불편으로 인하여 제값을 못받는다거나 어획물의 선도에 손상이 간다면 어민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조금 지나친 제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행정적인 절차나 제도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어민의 어획물 처리만큼은 가장 그 순위를 우위에 두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한가지는 임해공단 건설이나 수산자원의 고갈로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되살리고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업소득이 아닌 어업외소득을 개발하는데도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민들의 어업외소득이란 결국 어업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항만이든, 어항이든 어민을 위한 시설을 개발할 때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어민도 배후 관련 구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묘방도 차체에 한

번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민 모두의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운항만청 지정 항만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운항만청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항들을 모두 관장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수출입 물동량까지 챙겨야 하는 입장이므로 어민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관장하기란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되고 또 전문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이 부분, 저 부분을 모두 손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어선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항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어항구역으로 설정하여 과감히 관리와 업무를 이양해 버리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겠는가.

속초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같이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실제 그것이 실현되어 활발한 남북한 교역의 창구가 되었을 때 자칫 또다시 대의명분에 밀려 어민들이 이용하는 항은 꼬리를 감출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노파심 같지만 권한의 크기만 쥘 것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도 함께 재는 행정의 되기를 어민들은 바라고 있을 뿐이다.